

낙농업계 유통업체 우유 덤핑판매 자제 요구

대형유통업체들간 불붙은 할인 전쟁으로 인해 우유 덤핑판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낙농업계가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우유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월 27일 대형유통점에서 성행하고 있는 우유 덤핑판매에 대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 대형유통업체에 발송했다.

낙농우유협회가 이처럼 덤핑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형유통점에서 시유제품(1ℓ~2.3ℓ)에 대해 14%~24%까지 덤핑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회는 연초부터 불붙은 유통업체의 생필품에 대한 가격인하 과당경쟁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낙농우유협회는 대형유통업체들에게 “낙농가들과 낙농산업은 낙농선진국과의 FTA 체결과 구지역 발생으로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와중에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또다시 성행하고 있는 우유 덤핑판매가 장기간 고착화될 경우, 우유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한 시장왜곡으로 유업체 경영악화는 물론 낙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낙농산업 발전 및 우유의 올바른 가치전달을 저해하는 우유 덤핑판매 강요를 중단해 줄 것을 대형유통업체에 강력히 요청했다.

낙농우유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2008년 당시에도 협회의 요청으로 장기간 지속된 우유 덤핑판매를 우여곡절 끝에 종식시킨바 있다”며 “우유가 유통업체의 생필품 가격인하 품목에 포함되면서 거래싸움에 등태지는 꼴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유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 제고 및 낙농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덤핑판매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낙농우유협회 ‘한·중 FTA영향분석’ 연구결과 “고품질로 중국 고소득층 공략해야”

중국과의 FTA는 우리 낙농업계에 위기가 될 수도 있

지만 철저한 준비가 있을 경우 수출 확대 등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낙농우유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월 1일 영남대 조석진 교수와 건국대 정경수 교수에 의뢰한 ‘중국의 낙농산업과 한·중FTA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낙농산업에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인한 식생활 패턴 변화로 우유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연간 3천525만톤(2000년 기준)으로 연 평균 10%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소비증가로 인해 중국 정부 역시 낙농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우유 생산국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낙농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가능성이 높은 전지분유와 카제인에 대해 부분균형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계속한 결과 2009년 대비 관세감축비율이 10%일 경우 169억원의 국내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관세감축비율이 25%일 경우에는 421억원, 50%일 때는 839억원, 75%일 때 1천254억원, 100% 감축(무관세)시에는 최대 1천667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품질을 무기로 중국산 유제품과 차별화 시킬 경우 국내산 유제품의 수출 기회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산 시유가 중국내에서 국내가격의 2.5배 전후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수출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시유는 물론 발효유 등 액상 유제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낙농우유협회 이승호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국은 우리 낙농산업에 있어 중요한 시장임과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낙농산업 구성원의 공동노력과 더불어 낙농제도개혁 등 낙농육우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유생산량 10년내 최저

지난해 원유생산량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재풍)가 최근 발표한 1월 낙농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생산량은 211만톤으로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9년 202만7천톤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며 2002년도 253만6천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이처럼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낙농가의 경영의욕 저하와 함께 소비감소, 노력화에 따른 구조조정, 생산조절제 정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백색 시유 소비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백색 시유 소비량은 138만9천톤으로 전년 135만1천톤에 비해 2.8%가 증가했다.

그러나 백색 시유를 제외한 가공시유(-11%), 발효유(-2.3%), 치즈(-0.7%), 전지분유(-14.8%) 등 대부분의 소비는 줄어들었다.

특히 생산량 감소와 소비 증가에 따른 잉여원유량이 감소하면서 분유와 치즈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탈지분유와 버터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낙농가수는 12월 현재 6천888농가로 전년 동월 7천323농가에 비해 5.9%가 줄어들었으며 착유우 두수는 21만7천578두로 전년 동월 22만1천337두에 비해 1.7%가 감소했다.

한·EU FTA, 4월중 정식서명 합의

한국과 유럽연합(EU)이 4월 중으로 한·EU FTA에 정

식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상품들에 대한 관세감축 방식은 일부 조정해 3년 철폐 품목은 만 3년으로, 5년 철폐품목은 만 5년으로 각각 수정하게 된다.

이해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지난 2월 10일 "한·EU 양측은 올해 중으로 한·EU FTA를 발표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4월 중 한·EU FTA를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EU 양측은 지난해 10월 가서명할 때 올 1분기 중 정식 서명하기로 했지만 다소 늦어졌다.

양측은 또 관세감축 방식과 관련,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3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5년에 각각 철폐하는 것으로 조정기로 했다.

기존 방식에 따른 때 3년 철폐품목은 만 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4년에 철폐가 완료된다.

한·EU FTA가 10월1일 발효된다면 기존에는 10월1일 관세가 한차례 감축된 뒤 내년 1월1일 두번째로 감축되지만 새로운 방식대로라면 올해 10월1일에 이어 내년 10월1일 관세가 감축되는 것이다.

이는 축산물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EU측은 쇠고기와 천연꿀에 대해 단기철폐(3~5년)를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해 즉시철폐를 양허안으로 내놓는데 반해 우리측은 10년 이상 장기 철폐 품목에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치즈 등을 양허안으로 내놨다.

'축산업 등록제' 전면 확대 검토

정부가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축산농장 방문자제, 해외여행 시 농장 및 동물접촉 자제 등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지를 위해 축산업 등록제의 의무등록대상 축종 및 대상농가를 확대하고 처벌규정도 강화하며,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브리핑을 갖고 “구제역이 지난 1월 29일 6차 발생을 이후로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조기종식을 위해 더욱 긴장된 자세로 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설 명절, 개학, 농번기 시작, 기온 상승 등에 의한 유동인구 증가로 잔존하고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일부지역에서 고병원성 시가 발생함에 따라 여행객을 통한 유입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하영제 차관은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해당지역이나 축산농가를 방문할 때는 차량의 내외부소독과 함께 사람도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며 “해외여행시 현지농장방문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돌아올 때 축산물을 들여오지 말고, 귀국 후 72시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축산농가방문을 자제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과거 발생사례를 볼 때 2~6월이 구제역 및 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하영제 차관은 “지난 9일부터 일부 경계지역의 동물이동제한이 해제된 것이 구제역 위험도가 낮아지거나 종식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당국과 축산농가 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방역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해 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육환경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위생, 방역, 질병, 공기역학, 축사시설 전문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축산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 특별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밀식사육 방지, 적절한 분뇨처리 등을 위해 HACCP인증제, 친환경 축산물인증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등 기존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행 축산업 등록대상 축종을 소, 돼지, 닭, 오리에서 사슴, 염소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농가도 사육시설 20~300㎡에서 전 농가

로 확대하면서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고 농가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육우가격 강세에도 송아지값은 '제자리'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육우가 설 전까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잘나가고 있다.

하지만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우농가들은 미래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 송아지 가격 오름세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월별 등급판정 및 경락가격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평균가격은 7천원대에서 머물렀으며 2등급 가격 역시 8천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8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전체 평균은 8천900원대를 기록했으며 2등급은 9천576원을 기록했다.

9월에는 추석 명절 수요와 맞물려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평균은 9천359원을 2등급 평균은 1만원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상승세는 지속돼 11월에 전체 평균이 1만원대를 넘어서고 2등급 평균은 1만1천원대를 기록했다.

더욱이 해를 넘겨 올해도 이 같은 육우가격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중 평균 경락 가격은 1만631원이었으며 2등급 평균은 1만1천339원이었다.

설 수요가 많았던 2월 중에는 한때 2등급 평균 경락 가격이 1만2천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육우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송아지 가격은 20만원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육우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육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내산 육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육우자조금이 출범하고 농식품부가

육우홍보를 위해 지원하면서 TV를 통해 육우가 알려지고 각종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육우가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낙농육우협회가 지난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육우얼굴찾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육우 홍보 활동을 강화하면서 육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TV광고가 나가기 시작한 이후에는 낙농육우협회 담당 직원의 경우 문외지나 목주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으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육우 구입을 희망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소비자들이 육우를 쉽게 구입할 수 없었으나 농협 하나로클럽 매장에서 육우판매대를 설치했으며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체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통해 육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도축세 폐지 관련 법안 빨리 처리돼야

도축세 폐지가 지연되면서 관련 단체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추진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축세란 소와 돼지를 도축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가격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형식.

현재 한우는 마리당 약 3~5만원, 돼지는 2500원 가량 등의 도축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등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도축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만큼 국내 소·돼지 사육농가를 위해 도축세가 하루 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에 정부도 지난해 3월 5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축세 폐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4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이후 계속 계류되다가 지난 2월 17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별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올해 안에 도축세 폐지 시행은 어려운 상황.

국회 행정안전위 관계자는 "도축세 폐지 등을 담은 지방세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2011년이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우농가 등은 도축세 폐지가 지연되면 농가가 피해를 본다며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축세 폐지가 제도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폐지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부장은 "법안 심사가 지연돼 농가들도 과연 도축세가 폐지 되는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것은 최대한 빨리 처리돼 6월부터라도 시행되는 것이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법이라도 빨리 개정하고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축산신문, 농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